

# “나는 꿈수다”

## 與, 비례당 창당 당 안팎 갈등 ‘개혁보단 밥그릇’ 고해성사 쏘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 추진을 검토하면서 당내 갈등이 불거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 훼손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갈등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 만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선출 전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미래한국당 창당으로 통합당이 얻을 비례대표 의석수가 민주당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발적인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이 등장했다.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정치개혁 연합(가칭) 창당’ 제안서를 민주당에 보낸 상태다.

이들은 진보 진영(민주당·정의당·녹색당 등)이 창당한 연합 정당에 각각 비례대표 후보가 파견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통합당이

미래한국당과 연계로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 확보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전체 비례대표 의석(47석) 가운데 의석수 30석 이상의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17석을 갖고 경쟁한다. 지역구 의석 30석 미만의 정당의 경우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3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구조이다.

즉, 3월 현재 지역구 의석수가 30석 이상인 민주당과 통합당은 2016년 20대 총선보다 비례대표 의석을 덜 가져가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이에 반발해 지역구 의석수 30석 미만의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 추가 확보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 역시 통합당에 맞서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을 검토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사실상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창당할 경우 통합당과 같은



이해찬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판에 휘말리는 점이다. 김해영 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정당 본질에 반하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현명한 심판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눈앞의 유불리보다 원칙을 지켜나가는 정당이 되겠다”며 반발했다.

강훈식 당 수석대변인도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자체적인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과 관련해 “비례대표는 (민주당에서) 내야 한다. 비례대표를 내지 않을 경우 (통합당과) 똑같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과 함께 지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연대한 민생당·정의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금소처장에 김은경 교수 금감원 최초 여성 부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여성인재발굴·균형인사 기여 기대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조직 개편

금융감독원 신임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임명됐다. 금감원 부원장급 자리를 여성이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4차 정례회의를 갖고 김 교수를 금감원 금소처장에 임명했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이 제청하고, 금융위가 임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김 신임 부원장은 금융 법률, 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금융당국의 원활한 업무조율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할 책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금감원 최초의 여성 부원장으로 금융분야 여성인재발굴 및 균형인사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소처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종전 6개 부서·26개 팀에서 13개 부서·40개 팀으로 대폭 확대됐다. 소비자 피해예방 부문은 금융상품 약관심사, 금융상품 모집·판매, 금융상품 광고·공

시, 불공정 거래 관행 등 상품 판매 전반에 대해 감독 기능을 갖고, 소비자 권익보호 부문에서는 민

원·분쟁·검사 기능을 수행한다. 감독, 검사부터 분쟁조정과 제재까지 모두가 가능한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신임 금소처장에 누가 낙점될 지 하마평이 무성했다.

김 신임 부원장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만하임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 위원과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위 음부즈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임기는 오는 9일부터 3년 간이다.

기존 유광열 수석부원장과 권인원 부원장, 원승연 부원장 등은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미 기자 smah1@

# 외환보유액 반년만에 감소... 달러 강세 영향

한은 2월 외환보유액 4092억弗  
최대 경신 기록 5개월만에 깨져  
美 달러화지수 전월비 0.6% ↑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0년 2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091억7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4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반년 만에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유로화, 엔화 등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 달러화 환산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0년 2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091억7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4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감소 전환이다.

이로써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이어진 사상 최대 경신 기록도 5개월 만에 깨졌다. 지난 1월 외환보유액은

98.51로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국채와 정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MBS) 등 유가증권은 3712억2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72억3000만달러 감소했다. 반면 해외 중앙은행이나 글로벌 은행에 맡긴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은 271억달러로 68억달러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제통화기금(IMF) SDR(특별인출권)은 32억7000만달러로 6000만달러 줄었다. IMF 포지션은 27억9000만달러로 1000만달러 늘었다. 금은 47억9000만달러로 전월과 같았다.

지난 1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4097억달러)은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했다. 1위는 중국(3조1155억달러), 2위는 일본(1조3434억달러)이었다. /김희주 기자 hj89@

# 부산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지원

13개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도모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부산지역 8개 공공기관은 ‘부산 사회적경제지원 기금(BEF)’의 제2기 금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지역 13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지역 8개 공공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에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다.

BEF은 (Busan Embracement F

und for Social Economic Development)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지역 8개 공공기관이 조성한 기금으로 (사) 사회적기업연구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업 초기 또는 사업화 준비단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과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동래 차밭길 꽃차’, ‘영도 해녀’ 등 특색 있는 13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 아이템을 홍보하고 펀딩 목표금액이 달성되면 펀드에서 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매칭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희주 기자

# 하나銀 전 영업점 코로나19 지원 창구 운영

하나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금융 지원을 위해 전 영업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4일 지성규 행장은 서울 중구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소재한 을지로 지점을 찾아 지역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 경영자금을 지원했다.

하나은행을 방문해 지 행장의 면담을 받은 한 손님은 2014년부터 한식점을 운영해 2019년까지 영업 신장세를 이어오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매출이 급감, 인건비와 원부자재비 등의 고

정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긴급자금지원 요청을 했다.

지성규 행장은 “음식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영업 현장에서 다른 업무보다 최우선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금융애로 상담, 지원을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견·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해 관할 관청의 피해사실 증명 없이더라도 영업점의 재량으로 피해기업으로 판단 시 4000억원 한도내에서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성규 행장(왼쪽)이 4일 서울 중구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 소재한 을지로 지점을 찾아 지역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있다. /하나은행

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만기 및 분할상환 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며 최대 1.3% 포인트의 금리 감면 등도 지원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증권사도 스타트업 발굴 가능해진다

금융위, 혁신금융 활성화 정책과제 펀딩 통한 자금모집 기업 범위 확대

앞으로 증권사는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겸업이 허용돼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도 7년 이내의 창업·벤처기업에서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 및 상장 3년 이내인 코넥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2020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된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증권사가 중소기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겸영업무에 추가하고 일정 규모의 벤처대출은 순

자본비율(NCR) 산정시 영업용 순자본 차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기업금융 대출 범위에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 특히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발행 사모사채 및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폭을 축소하고, 레버리지비율을 일부 완화되도록 중소기업 투자가 활성화 되는 방안을 강구한다. 중소·벤처기업 투자시 NCR 위험액을 가중하는 지분율(5%)도 상향 조정한다.

크라우드 펀딩 대상을 업력 7년 이내의 창업·벤처기업에서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 및 상장 3년 이내인 코넥스 기업으로 확대한다. /나유리 기자